

#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정현준\* · 정원준\*\*

## 1. 서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시스템과 행태를 포함한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전면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크게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틀 전환, 규제정보의 창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신고·등록,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일몰설정, 규제존치 타당성 소명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15년 1월부터 전 부처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고, 국무조정실은 7월 18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산림청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352, jjoon75@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 연구원, (043)531-4009, visix@kisdi.re.kr

\*\*\* 본 연구는 KISDI ICT산업연구실에서 수행 예정인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의 사전연구 결과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규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도 현행 규제수준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여기서는 중앙부처의 등록규제 현황을 성격별, 분야별로 정리한 후, ICT 부문의 등록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2. 우리나라 등록규제 현황

### (1) 규제등록 제도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동법 동조). 또한 직권으로 조사하여 미등록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동법 동조). 이때 등록 내용에는 규제의 명칭,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규제의 처리기관,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규제의 존속기한,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2) 중앙부처 등록규제 현황

중앙부처 등록규제는 행정규제 중에서도 국가(중앙부처)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규제정보포털). 2014년 7월 28

1) 대한상의는 기업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현행 규제수준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67.2%). (대한상의 기업설문조사, 2013. 9; 국무조정실(2014. 3. 20)에서 재인용)

일 현재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5,327개로, 국토교통부 2,450건, 해양수산부 1,506건, 보건복지부 1,203건, 산업통상자원부 1,197건, 금융위원회 1,095건 등의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되어 있다.

〈표 1〉 중앙부처 등록규제 현황

(단위: 개)

기관명(부·위원회)	등록규제 개수	기관명(처·청)	등록규제 개수
고용노동부	571	경찰청	148
공정거래위원회	482	관세청	37
교육부	465	국가보훈처	108
국가인권위원회	1	국세청	15
국무조정실	15	금융감독원	42
국민권익위원회	4	기상청	21
국방부	36	농촌진흥청	16
국토교통부	2,450	문화재청	100
금융위원회	1,095	병무청	9
기획재정부	220	산림청	393
농림축산식품부	940	소방방재청	518
문화체육관광부	386	식품의약품안전처	457
미래창조과학부	599	중소기업청	151
방송통신위원회	133	통계청	5
법무부	229	특허청	84
보건복지부	1,203	해양경찰청	82
산업통상자원부	1,197		
안전행정부	397		
여성가족부	171		
외교부	35		
원자력안전위원회	95		
통일부	57		
해양수산부	1,506		
환경부	854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www.better.go.kr, 2014. 7. 28)

### 3.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ICT 부문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ICT 관련 부처의 등록규제 현황과 ICT 분야별 등록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우선 규제의 성격별로 ICT 관련 부처의 등록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ICT 부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부처 전반의 등록규제 현황과 비교한다. 그리고 ICT 부문의 업종별, 활동별 등록규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분야별 규제 분류체계를 검토했다.

#### (1) 성격별 규제분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가장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들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이다. 이때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란 기업의 설립 혹은 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이고,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거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이다(최병선, 2013).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이외에 행정적 규제를 추가적으로 들고 있다. 이 때 ‘행정적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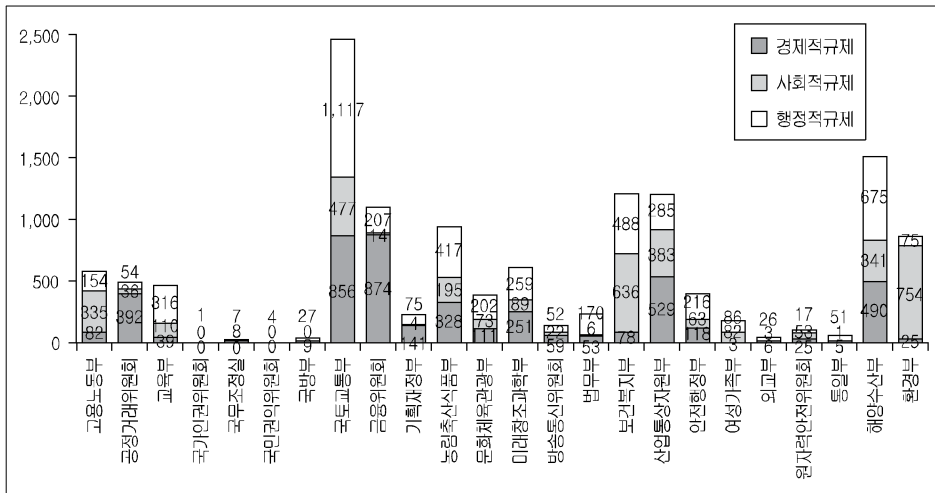
#### 1) 중앙부처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현황

중앙부처의 경제적 규제는 총 5,053개이며, 금융위원회 874개, 국토교통부 856개, 산업통상자원부 529개, 해양수산부 490개, 공정거래위원회 392개 등의 순으로 등록

2) 여기에서 ‘법령 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하며(동법 동조 동항 제2호), ‘고시 등’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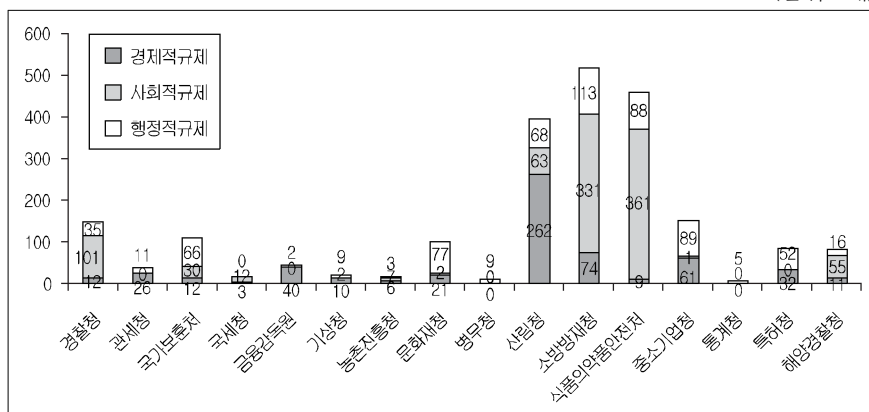
되어 있다. 한편 사회적 규제는 총 4,650개로 환경부 754개, 보건복지부 636개, 국토교통부 477개, 산업통상자원부 383개, 식품의약품안전처 361개 등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2014년 7월 28일 현재).

[그림 1] 중앙부처의 경제적·사회적·행정적 규제 등록 현황(부·위원회)  
(단위: 개)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www.better.go.kr, 2014. 7. 28)

[그림 2] 중앙부처의 경제적·사회적·행정적 규제 등록 현황(처·청)  
(단위: 개)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www.better.go.kr, 2014. 7. 28)

중앙부처의 업무 성격에 따라 정부부처 및 위원회를 경제·산업 관련부처와 사회·안전 관련부처로 구분할 경우, 경제·산업 관련부처에는 경제적 규제가 많은 반면, 사회·안전부처에는 사회적 규제가 많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여기서 경제·산업 관련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sup>3)</sup>에 참석 대상이 되는 1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경제 및 산업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9개 부 및 위원회 그리고 10개 관련 처 및 청(총 19개 부처)<sup>4)</sup>으로 정의했고, 사회·안전 관련부처는 전체 부처에서 경제·산업 관련부처를 제외한 21개 부처<sup>5)</sup>로 정의했다.

<표 2> 중앙부처의 경제적·사회적·행정적 규제 등록 현황

(단위: 개, %)

구분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행정적규제	총합계	비중	부처수
중앙부처	5,053 (33.0)	4,650 (30.3)	5,624 (36.7)	15,327	100%	40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부처	4,317 (34.4)	3,600 (28.7)	4,633 (36.9)	12,550	81.9%	16
경제·산업 관련부처	4,434 (45.2)	1,752 (17.8)	3,614 (36.8)	9,800	63.9%	19
사회·안전 관련부처	619 (11.1)	2,898 (52.4)	2,010 (36.3)	5,527	36.0%	21

주: 규제정보포털은 중앙부처 40곳의 규제 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 데이터 가공(www.better.go.kr, 2014.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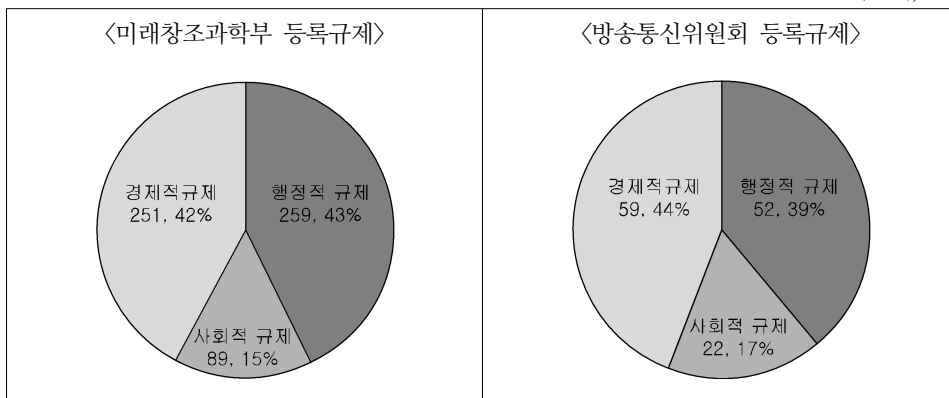
- 3)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경제관계장관회의규정 제5조 제2항).
- 4)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 및 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이상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상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중소기업청(이상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해양교통부) 등 10개 관련 처 및 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 5)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환경부 등 15개 부 및 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국무조정실), 병무청(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 기상청(환경부) 등 6개 관련 처 및 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ICT 부문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현황

ICT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는 총 599개의 등록규제 중 경제적 규제는 251개(41.9%), 사회적 규제는 89개(14.8%), 그리고 행정적 규제는 259개(43.2%)가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규제 수는 총 133개로 이중 경제적 규제가 59개(44.3%), 사회적 규제 22개(16.5%), 그리고 행정적 규제가 52개(3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단위: 개, %)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 데이터 가공(www.better.go.kr, 2014. 7. 28)

ICT 부문의 경제적 규제 비중은 전체 중앙부처 32.9%에 비해 10%p 가량 높고, 사회적 규제는 전체 중앙부처 30.3%에 비해 15%p 가량 낮다([그림 3] 참조). 앞서 <표 2>의 중앙부처의 현황과 비교해보면, 경제·산업 관련부처에 속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제적 규제는 여타 경제·산업 관련부처의 평균에 가까운 비중을 갖지만, 사회·안전 관련부처로 분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사회·안전 관련부처보다 경제적 규제의 비중이 다소 높고 사회적 규제 비중이 낮은 특징이 있다.

## (2) 분야별 규제분류: 업종별 등록규제와 활동별 등록규제

### 1) 업종별 규제와 활동별 규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분야별 등록규제를 업종별 등록규제와 활동별 등록규제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부처의 규제등록정보가 행정업무 중심으로 목록만을 제공하여 기업과 국민이 규제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10년 11월 7천여건(주규제 기준)에 대한 규제분류체계를 마련하고 1차로 관심도가 높은 11개 업종과 24개 활동분야로 4천여건을 정비하여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2011년에는 남은 3천여건을 정비하여 규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분야별 등록규제 분류체계

구분	분류체계 (2011년 2차 서비스)
업종별 규제정보	농림수산업, 광업, 전력, 에너지, 수자원, 건설업, 공사업, 운송업, 창고업, 출판업,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업, 보건업, 복지서비스, 관광, 문화, 학술, 오락, 사회단체, 협회조합, 국제기구, 개인서비스, 가사, 보육서비스, 공공기관, 일반시민(32개)
활동별 규제정보	연구개발/조사, 제품규격/표준설정, 제품등록/인증획득, 환경관리일반, 대기환경관리, 수질/토질환경관리, 소음등기타환경관리, 폐기물/재활용, 시설설치, 시설유지/보수, 구입/보관/관리, 반입/반출, 수출입일반, 수입관리, 수출관리, 업무관리일반, 홍보/보고/정보제공, 고객관리, 영업범위/방식, 업무계약/위탁, 조직구성/임원선임, 직원채용/고용/해고, 보수관리/고용보험, 교육/연수, 노사협의/근로복지, 안전관리/보건, 정보통신/정보보안, 재무관리/회계관리, 자산취득/투자관리, 가격/요율결정, 사업자단체구성, 출생/사망, 혼인/이혼, 출산/입양, 거주/이전, 여가/취미, 관광, 문화/예술, 정보통신, 국적/출입국, 보훈/상훈/보상, 국방/예비군/민방위, 사법/재판, 선거/공직(44개)

주: 규제개혁위원회는 2010년 관심도가 높은 11개 업종과 24개 활동별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2014년 현재 32개 업종, 44개 활동별 규제정보를 제공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www.better.go.kr, 2014. 7. 28)



업종별 규제정보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에 적용되는 정부규제를 기업 활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활동별 규제정보는 사업개시, 공장설립,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정부규제를 개별 산업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활동별 분류체계는 업종별 분류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 2) ICT 부문의 업종별 규제와 활동별 규제

업종별 규제정보에서 ICT 부문과 관련 있는 업종 분류는 사업자 공동 항목을 제외하면, 제조·판매·임대업(전자제품·컴퓨터·통신장비), 출판·방송·정보통신(방송·통신, 출판·방송·정보통신(정보기술·인터넷서비스) 세 가지가 있다. 제조·판매·임대업(전자제품·컴퓨터·통신장비) 업종에는 8개, 출판·방송·정보통신(방송·통신)에는

〈표 4〉 ICT 관련 업종별 등록규제

제조·판매·임대업 (전자제품·컴퓨터·통신장비)	출판·방송·정보통신 (방송·통신)	출판·방송·정보통신 (정보기술·인터넷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시관련 인허가(2)</li> <li>○ 품질관리·제품등록(1)</li> <li>○ 시설·설비관리(1)</li> <li>○ 영업·보고·업무관리(3)</li> <li>○ 안전관리·정보통신(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시관련 인허가(26)</li> <li>○ 공장·법인설립·부동산(2)</li> <li>○ 연구개발·조사(1)</li> <li>○ 품질관리·제품등록(3)</li> <li>○ 시설·설비관리(4)</li> <li>○ 국내물류관리(3)</li> <li>○ 영업·보고·업무관리(67)</li> <li>○ 노무·조직관리(2)</li> <li>○ 안전관리·정보통신(23)</li> <li>○ 재무관리·투자·가격(11)</li> <li>○ 사업변경·휴폐업·합병(5)</li> <li>○ 생활경제·취업(1)</li> <li>○ 여가·문화·정보통신(1)</li> <li>○ 질서·안전·환경(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시관련 인허가(9)</li> <li>○ 공장·법인설립·부동산(1)</li> <li>○ 연구개발·조사(1)</li> <li>○ 품질관리·제품등록(2)</li> <li>○ 국내물류관리(1)</li> <li>○ 영업·보고·업무관리(39)</li> <li>○ 노무·조직관리(1)</li> <li>○ 안전관리·정보통신(28)</li> <li>○ 사업변경·휴폐업·합병(2)</li> <li>○ 사업자단체 구성(1)</li> <li>○ 여가·문화·정보통신(1)</li> </ul>
8개	150개	86개

주: 세부 업종별 분류체계는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를 참고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www.better.go.kr, 2014. 7. 28)

150개, 출판·방송·정보통신(정보기술·인터넷서비스)에는 86개의 규제가 각각 분류되어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앞의 <표 4>와 같다.

활동별 규제정보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정부규제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ICT와 관련한 활동분류는 안전관리·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보안)과 여가·문화·정보통신(정보통신·인터넷)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ICT 관련 활동은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보안) 활동은 14개 산업에 118개의 규제로 분류되어 있고, 여가·문화·정보통신(정보통신·인터넷) 활동은 5개 산업에 20개의 규제로 분류되어 있다(<표 5> 참조).

<표 5> ICT 관련 활동별 등록규제

안전관리·정보통신 (정보통신·정보보안)	여가·문화·정보통신 (정보통신·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공통(4)</li> <li>○ 광업(1)</li> <li>○ 제조·판매·임대업(1)</li> <li>○ 전력·에너지·수자원(3)</li> <li>○ 운송·창고업(6)</li> <li>○ 출판·방송·정보통신(49)</li> <li>○ 금융·보험업(17)</li> <li>○ 부동산업(1)</li> <li>○ 연구개발·전문서비스(7)</li> <li>○ 교육서비스(2)</li> <li>○ 의료·보건·복지서비스(13)</li> <li>○ 관광·문화·학술·오락(2)</li> <li>○ 공공기관(10)</li> <li>○ 일반시민(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공통(1)</li> <li>○ 건설·공사업(1)</li> <li>○ 출판·방송·정보통신(2)</li> <li>○ 관광·문화·학술·오락(1)</li> <li>○ 일반시민(15)</li> </ul>
118개	20개

주: 세부 활동별 분류체계는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를 참고  
 자료: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www.better.go.kr, 2014. 7. 28)

## 4. 결 어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정부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개입하는 수단이 바로 규제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업과 시장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나아가 한번 생긴 규제는 사라지지 않고 지대를 산출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비용을 분석해야 한다. 1998년부터 시행된 규제영향평가<sup>6)</sup>가 잘 이루어져 왔다면, 개념상 규제비용은 규제영향평가에서 기업의 순비용만을 뺐아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영향평가는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데 역부족이었고, 이로 인해 규제비용 분석에 활용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와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등록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규제비용분석을 통한 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공적인 운영의 기초가 된다. 나아가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분석은 ICT 부문에 어떠한 규제가 존재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정부의 투명한 규제정보 공개와 규제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개혁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산업 전반에서 ICT의 활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ICT 기반의 융합산업 성장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6) 행정규제기본법은 제7조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필요성, 실현가능성,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4. 2. 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 (2014. 3. 20),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개혁장관회의, 2014. 3. 20.
- 최병선 (2013), 『정부규제론』, 법문사, 초판 21쇄.
- 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국무조정실 (2014),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시범사업용”, 2014. 7.
-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www.better.go.kr](http://www.better.go.kr))